

# 육아정책 소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8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하는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기간의 업무공백 없이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연1회 2주 단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 최대 금액을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 역시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체계 완성을 통해 양육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임기 내 3, 4세까지 사립유치원 대상 유아학비 28만원 외에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의 보육료 외 기타필요경비로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프로그램은 27년까지 초4~6학년까지 무상운동을 확대하고, 시간제보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야간연장, 휴일, 방학운동을 확대하여 틈새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비를 상향 등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

해 본 사업까지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나 하청업체 직원, 인근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경우 정부 포상시 우대하고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상생형 사례를 발굴, 확산한다.

세 번째는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분야로 주거마련 부담을 줄여주고자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 주택을 최대 1.4만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기존 특공 당첨이력을 1회 배제해 주는 등 분양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완화해주고, 난임시술 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급여적용 기준 완화 등 난임 시술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15대 핵심과제 외에도 각계각층과 협의체 구성 및 소통, 홍보를 강화하고, 생명, 가족, 공동체 가치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을 확산하고, 상세 인구전망 공유 및 다양한 통계지표 개발과 제공, 그리고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을 통해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일자리,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내용 >

| 3대 분야         | 15대 핵심과제  |
|---------------|---|
| 일·가정 양립       | ① 단기 육아휴직 도입(年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br>②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現150→최대 250만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現80→120만원)<br>③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現90→120일) 및 분할휴수 확대(現1회→3회)<br>④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br>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외 사용 활성화    |
| 교육·돌봄         | ①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br>② 놀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25년 초1,2 → '26년 초3 → '27년 초4~6)<br>③ 틈새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 확대)<br>④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br>⑤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 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2.5억원, 3년간)<br>②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年7만호→12만호+α)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호)<br>③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br>④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br>⑤ 난임시술 대폭 지원(예: 필수 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등) |

##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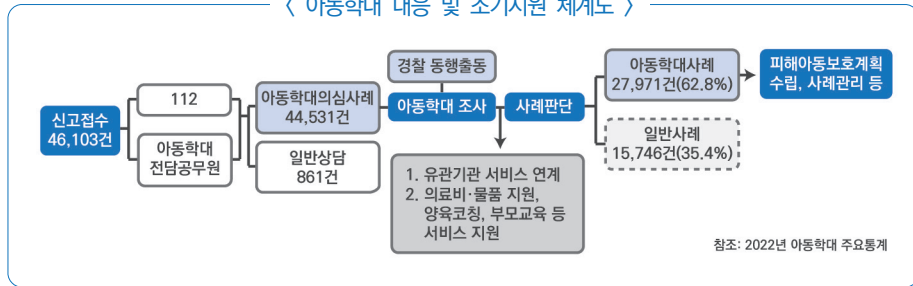
전국의 20개 시·군·구에서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① (신속지원 중심형)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돌봄서비스 비용, 필수 물품(기저귀,분유,학용품) 등 지원**(지자체 중심)
- ② (가족기능 회복형) 일반사례 가정 중 가족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교육, 가족 유대 제고 및 소통 활동(필요 물품) 등 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 ③ (양육코칭 지원형)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간 갈등이 있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문 상담 지원(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중심)
- ④ (양육상황 점검형) 일반사례 가정에 대한 **주기적 방문(최소 3회 이상)**을 통해 **양육 상황 확인 및 욕구 사항 파악지원**(지자체 중심)

〈 아동학대 대응 및 조가지원 체계도 〉



##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27일(목)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은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으며 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되었으며, 24년 6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를 제시하였다.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다른 운영 기준-이용시간 및 일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비용, 교사 연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상향평준화 한다는 것이다. 이용 시간은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을 지원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 1:3에서 1:2, 보조교사 배치는 0-2세 3학급당 1명에서 2학급당 1명으로, 3-5세는 1:12에서 1:8로 낮춘다. 또한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추진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통합연수체계를 마련한다. 그 밖에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하며,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을 강화한다. (가칭)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24년 100개 내외 지정하고 25~27년까지 매해 1,000개를 추가 지정하여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하겠다 발표하였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의 기본 방향은 영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전제로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기준을 보완, 확정하고 통합법 제정을 통해 시행하며, 기존기관에는 전환에 따른 경과기

간(10년)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24년에 통합기관 기준(시안)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하고 25년 법률 개정 및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방식, 교육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교사처우개선, 법적지위 변경,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설립·운영 기준 면에서는 설립주체, 유형, 재산요건, 교실면적, 불연재사용, 실외놀이터, 입지요건, 입학대상, 운영위원회, 장학컨설팅 및 엄격한 회계·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